

유엔 대북 제재위 출범 임박

“北 선박 어디까지 뒤지나” 논란

유엔 안보리는 지난 14일 대북 제재결의 채택 때 합의한 대북 제재위원회를 이르면 수일내 출범시켜 북한 화물에 대한 해상검색 방법과 자산동결 대상 개인 및 단체 지정 등 결의안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안보리는 제재위 구성을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직 구성과 인원 충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늦어도 금주 중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의 소식통들이 17일 전했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을 포함한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제재위의 위원장에는 피터 베리안 슬로바키아 유엔주재 대사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는 특히 최대 정적사인인 북한 화물에 대한 해상 검문은 물론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험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화물 검색 대상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려는 미국·일본과 안보리 결의 내용을 좁게 해석하려는 중국·러시아가



안보리 내용 미·일 확대-중·러 축소 이견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험도 논의 가능성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 소식통은 “제재위의 본격적인 활동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과 러시아 등 4개국 순방 결과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국가와의 협의 결과가 제재위 활동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르면 제재위는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 무기(WMD), 사치품 등 특정 품목들에 대한 금수 여부를 결정하는 등 결

의 이행에 총괄적 실무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제재위는 북한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원회는 또 제재 실행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금수품목이나 범위, 규제대상 개인이나 단체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며 제재 관련 품목과 관련해 모든 관련국들을 상대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결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의심될 경우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갖는 것은

물론 제재조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침을 공표할 수 있고 추가로 금수대상 물자나 여행제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지명할 수도 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결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한 내용에 대해 30일 이내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며, 제재위는 최소한 90일마다 관찰 및 감독, 제재 이행 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한편 미 언론은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결의 12항에 따라 구성될 제재위 활동과는 별도로 이미 제재결의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들을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AP는 북한의 최대 맹방인 중국이 중국과 북한 간 국경지대인 단둥을 오가는 트럭들에 대해 검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中, ‘혈맹조약’ 파기할 수도

북 추가 핵실험시 中 대응은?

식량·에너지 지원 감축 방안도 고려

북한의 2차 핵실험 임박설이 유력하게 나오면 추가 핵실험 강행시 중국이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베이징에서 오기 차가게 일본 중의원 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이 여러 채널로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촉구했으나 북한은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내부 루트를 통해 북한에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고 6자회담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불구하고,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현재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로는 중국과 북한 간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북·중 상호호원조약의 파기가 꼽힐 수 있다. 양국 가운데 어느 일방이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으로 상대국을 군사지원토록 규정한 이 조약은 양국간 ‘혈맹관계’의 상징이

기도 하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해 지속해 온 식량과 에너지 지원의 감축 또는 중단도 제재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보다 낮은 수준의 압박은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1718호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다. 중국은 이미 1718호 결의에 따라 단둥(丹東) 등 접경 도시 세관에서 통관화물의 검색을 강화했고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북 송금계좌를 동결했다.

중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선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중국의 ‘레드 라인’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아니고 핵미사일 발사가 아닐까 하는 추정도 있어 북한이 이 선을 넘을 경우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 분명하다. /연합뉴스



금강산 관광에 대한 미래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18일 오후 관광을 떠나는 여행객들을 실은 관광버스가 도로를 따라 금강산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의 백악관 예방에 사실상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극진한 예우를 갖춰 유엔 사무총장 선출이후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반 당선자는 지난 14일 유엔 사무총장 공식 선출이후 17일 처음으로 위싱턴을 방문, 조지 부시 대통령과 닉 체니 부통령을 위시한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인사들을 두루 면담했다.

潘당선자, 확 달라진 예우

부시와 북핵 논의... 국가원수급 대접

반 당선자는 이날 오전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미 의회와 유엔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백악관을 예방, 부시 대통령과 북핵문제와 유엔 결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반 장관에게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반갑게 맞으며 악수를 청했고, 반 장관도 “그간 많은 도움을 줘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한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의 표

정은 그간 여는 국가 지도자를 맞은 것보다 더 밝고 환했다”면서 “그간 야난 총장과는 달리 이라크전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반 장관이 사무총장에 선출된데 대한 만족감과 기대감의 표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체니 부통령도 반 당선자에게 극진한 예우를 차리며 8대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거듭 축하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日 ‘핵무장론’ 잇단 제기

자민당 정조회장·아소 외상 등 ‘재무장’ 발판 마련 속셈

북한의 핵실험사태 이후 일본 당정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일본의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경파인 나가카와 쇼이치(中川昭一) 자민당 정조회장이 지난 15일

핵 보유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이어,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상은 18일 국회 답변에서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급속히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파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실제 미국측의 경제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앓다뉘 발언에 나선 ‘핵무장론자’들의 속셈은 북핵사태로 인한 ‘안보위기’를 극대화함으로써 재무장이 용이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movies and theaters. Includes sections for 'mega box'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엔터시네마), and '콜롬버스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with movie titles and showtimes.

Large advertisement for '광상무나이트' (Kwangshangmu Night) at Lotte Mart. Features photos of performers Minhaekyeong (민해경) and Kimsohui (김수희) and mentions dates 10월 19, 20, 26, 27.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Mountain Hiking Guide) listing various hiking routes, distan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group.